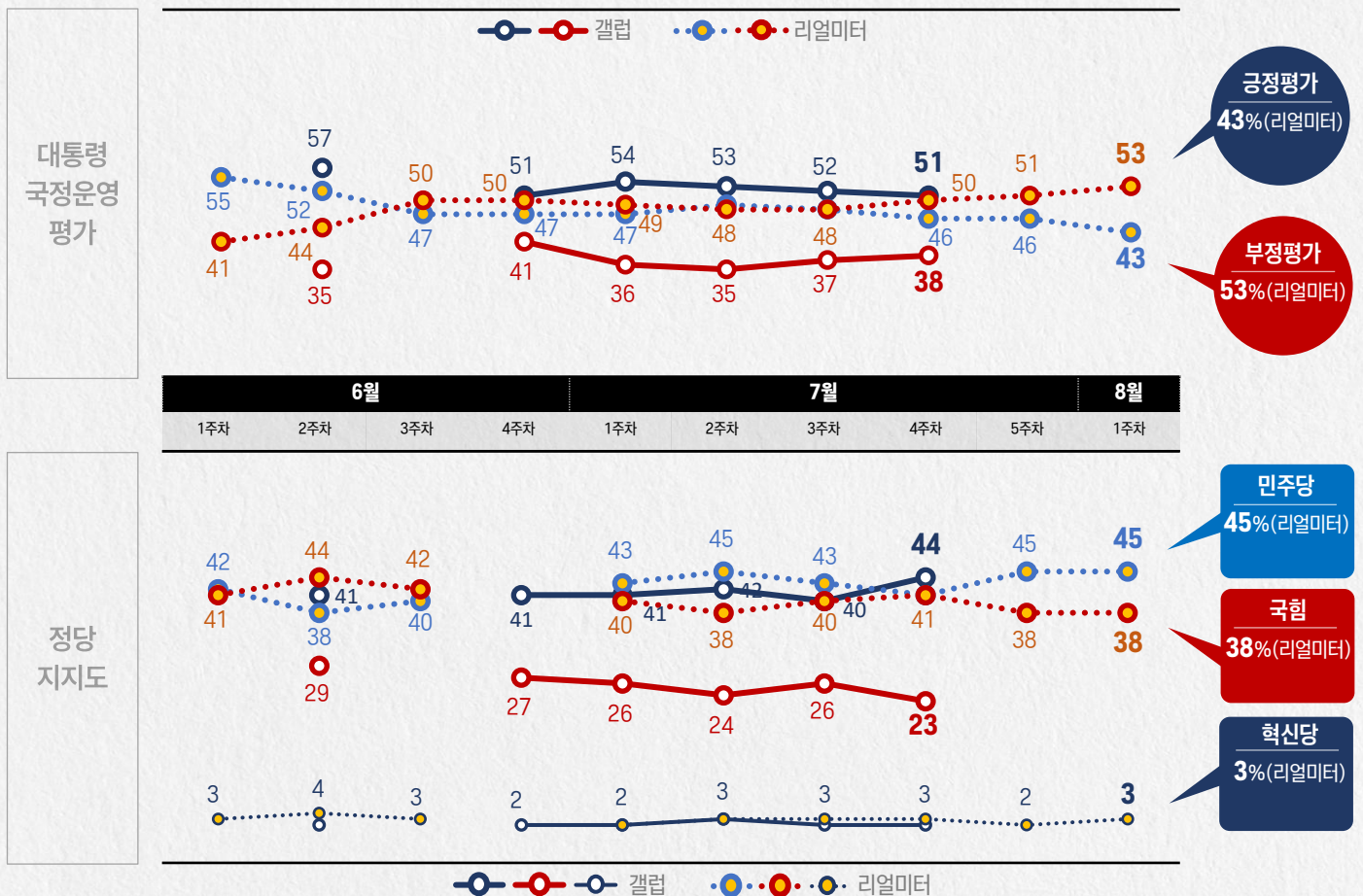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에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6월 1주차 ~ 2026년 8월 1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	-	-	-	-	-	-	-	-
	갤럽	-	-	-	-	-	-	-	-	-
	꽃	08/07 ~ 08	1,002	11.7%	54	45	(+9%p)	46	34	3 (13)
ARS (RDD)	리얼미터	08/06 ~ 07	1,007	3.4%	43	53	(-10%p)	45	38	3 (9)
	꽃	08/07 ~ 08	1,003	2.6%	47	52	(-5%p)	48	37	3 (3)

여론
동향



- [리얼미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잘한 결정 19%** vs. **잘못한 결정 64%**
쿠팡 대미 로비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적절 24%** vs. **부적절 64%**
- [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1%**, **김민석 30%**, **송영길 9%** 順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호도: **최민희 27%**, **서미화 17%**, **박선원 15%**, **한민수 13%**, **김용 7%** 順

03 정세 읽기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에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성공적인 집권 1년 차를 지나 지방선거를 거치고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을 위협할만한 대형 악재가 있었거나 집권여당의 결정적 실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내부의 권력 갈등을 주 요인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어쨌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지지를 보냈던 층의 상당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나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 입각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다. CATI(전화면접, 갤럽/NBS등) 기준 4월 60% 중후반, 5월 60% 초반, 6월 50% 초반, 7월 4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 기간 부정평가는 20%대 후반에서 40%대로 진입했다. 이는 적극 지지층의 열기 저하와 동시에, 정부에 유보적이던 층 일부가 부정평가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라 할 수 있는 ARS(자동응답, 리얼미터 등)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국힘의 지지율 격차는 유지되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국정 지지도 우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함의는 국정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고 정치 고관여층에서의 국정 지지는 이미 접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일반 중도층 전체에서는 아직 정부 여당의 우위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하락의 질적 특징이다. 6~7월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지율 하락의 경고 신호는 세 가지이다.

첫째, 30대와 청년층의 생활경제에 대한 불만이다. **둘째**는 수도권외의 부동산 불만 및 정권견제 심리의 작동이다. **셋째**는 4050 코어 또는 준코어 지지층의 정치적 실망이다. 중도층의 이탈은 성과로 회복 가능하지만, 코어 지지층의 실망은 당내 갈등과 개혁 정체성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조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열광이 줄었지만 국정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하지만 주요한 경고 신호가 켜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집권여당에 남겨진 숙제는 '변화'이다.

● 집권 2년 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일반적으로 집권 2년 차는 전 정부 책임의 시간에서 현 정부 책임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더 이상 전 정부 탓을 하기 힘든 시기에 접어든다는 의미이다. 집권 초기에는 전 정부의 실패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정상화라는 서사가 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 정부 탓보다 현 정부의 성과가 평가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기대가 개인 생활 상의 체감 효과로 진화한다. 취임 초 국민의 기대는 민주주의의 정상화, 경제 회복, 부동산 안정, 검찰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같은 거대 담론이었다. 그러나 점점 지표상 경제성장이나 주가 상승보다는 나와 연관된 주택비·월세·물가·자산시장 변동성 등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간극이 커진다면 개인의 체감도와 효능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03 정세 읽기

이재명 정부 2년 차에서 관측되는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현상은 민주개혁 연합의 정체성 충돌 현상이다. 이재명 정부 지지연합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친문·친노, 친명 핵심층, 조국혁신당 지지층, 중도 실용층까지 포함하는 넓은 연합이었다. 그런데 집권 후 이 연합 내부에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코어 지지층은 검찰개혁의 조기 완성을, 중도·실용층은 민생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대통령 중심 친명층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강한 방어를, 친문·친노 및 기존 민주진영은 민주개혁 진영의 역사성과 연속성 존중을 요구한다. 각각의 요구는 충돌할 수도 있고, 병행될 수도 있다. 현재는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충돌의 모양새가 더 도드라진다. 현재의 동요 상황은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이탈해서라기보다, 각 집단이 '내가 지지했던 정부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권여당의 흔들림은 정권의 통치능력의 기반의 동요라기보다는 압도적 지지연합을 유지하던 정치적 접착제가 약해진 연합 관리의 동요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린 권력 내부 갈등의 증폭

현재 집권 민주당 내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내부의 갈등 양상은 보편성과 특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어떤 권력이든 권력의 지향점, 방법론, 속도 등에서 다른 가치와 생각을 갖는 비동질적 하위 집단은 존재한다. 소위 '계파'다.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한 울타리안에 공존한다. 이런 내부 권력투쟁은 권력의 보편적 속성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내 갈등 양상은 상당한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의 속도, 혁신당과의 관계, 친명친문 등 당내 역학 등에서 다른 입장을 갖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상징 자산과 정권교체의 큰 경험을 공유하는 세력 간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 이상의 과도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고 이례적이다. 전당대회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고려하더라도 비적대적 경쟁 수준을 넘어서는 적대적, 극단적 정치투쟁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갈등의 소지는 애초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집권 후 첫 당대표 선거에서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자 다수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던 박찬대 의원 대신 당원주권파를 자임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었다. 갈등은 내면화되었고 큰 뼈격거림은 드러나지 않았다. 압도적 지지율이 갈등 구조를 덮은 상황이었다. 내면화된 갈등은 금년 이른 시점, 이른바 '문조털래유' 멸칭 논란으로 표면화되었다. 진영 내부에서 적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부 강성 친명 성향 온라인 공간에서 낡은 민주진영 권력,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세력 또는 이재명 중심의 새 질서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싸잡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서 갈등은 '친명 대 친문'에서 '친명 대 친청' 구도로 이동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권 경쟁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둘러싼 노선 경쟁보다는 적통성, 파묘 논쟁, 신천지 논쟁 등 자해적 경쟁 양상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방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연합을 축소하는 양상, 이재명 정부 민생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변화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 유시민과의 공개적 충돌 양상 등도 이러한 적대적 투쟁의 양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유례없는 내부 갈등은 지지층 내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극 지지층의 약화가 눈에 띈다. 식어버린 지지층, 즉 대통령을 여전히 긍정 평가하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소극적 지지'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대통령 평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도한 정치투쟁은 코어지지층의 이탈 뿐만 아니라 주변층, 중도층의 정치적 피로감을 키운다. 장기화된다면 자칫 국정동력 자체의 약화로 연결될 수도 있는 큰 리스크로 커질 수도 있다.

03 정세 읽기

● 민생경제 이슈의 부상과 외부 상황적 요인의 작동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는 그야말로 실력을 입증해야 할 도전적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복합적 난제들이다. 이 이슈들에서 체감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의 시간이 남았다.

첫째는 부동산 문제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8월 3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집값 상승이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부상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부동산 문제는 서로 다른 집단을 동시에 불만스럽게 만든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멀어진다. 절망감을 키운다. 전월세 거주자는 월세·보증금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는 세금과 대출규제 불안감이 커진다. 다주택·고가주택자는 규제 강화에 반발한다. 지방 거주자는 자산 양극화의 박탈감이 커진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신뢰이다. 상반된 정책 내용이 단기간에 반복된다면 시장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도 어떠한 정책도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신뢰의 회복, 그것이 핵심이다.

둘째는 주식시장 문제이다. 집권 초기 정부의 증시 정책은 주효했다. 증시는 신뢰를 회복하고 근거 있는 활황과 전 사회적 머니무브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증시가 한참 불타오르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전격 출시했다. 불과 한달 여 만에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으로 출렁였고, 과도한 레버리지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후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사안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되었으며, 책임론 또한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이 사안의 뼈아픈 점은 주가지수의 상승이 민생 개선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투자하지 않으면 뒤쳐지고, 투자하면 위험해지는' 딜레마를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셋째는 거시경제와 생활경제의 간극, 또는 이중성 문제이다. 요즘 뉴스 경제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2026년 성장률 전망, 내수 점진적 회복 등 긍정적 뉴스가 단골로 등장한다. 대부분 거시경제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은 생활 경제, 민생 경제이다. 자영업의 침체, 반도체 외 업종의 부진, 유가 및 식탁물가의 고공행진, 청년 취업난, 건설업 등 내수 부진 등이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메시지는 체감 민생경제의 개선과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진다. 그 간극이 커진다면 오히려 반발이 커질 것이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굵직한 민생 경제 이슈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